

보이스피싱 9~10월 피해 '최저치' 집계

올해 1~11월 피해액 5147억 전년비 28.2% ↓ 하반기 특별단속 범행수단 4만6000여개 적발

경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관련 전방위적 단속을 실시한 결과 올해 피해 발생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화금융사기 범죄피해 발생 건수는 1696건, 404억원이다.

올해 1~11월 누적 발생 건수는 2만 479건, 피해액은 5147억원으로, 전년 동기(2만8646건·7172억원) 대비 발생건수는 28.5%, 피해액은 28.2% 줄었다.

지난달까지 검거 건수는 2만3245건, 검거 인원은 2만3670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10.1%, 4.3% 감소했다.

경찰은 상대적으로 발생 건수가 감소하고 검거 비중은 늘어났으며 각종 범행 수단에 대한 전방위 단속·차단과 범죄조직 단속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올해 하반기(8월~10월) 특별단속을 진행해 범행수단 4만6166개를 적발했다. 아울러 각종 범행수단 불법 생성·유통행위 4331건, 유통사범 4538명을 검거(구속 201명)했다.

세부 단속 결과를 보면 대포폰 개통 비율은 감소했고, 대포통장은 여전히 1금융권 은행에서 주로 개통되는 가운데 법인·외국인 명의 통장이

상당수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나 통장 개설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화번호 번락 중계기 적발 건수는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단속 강화 영향으로 고정된 장소에 있는 중계기 비율이 감소하는 한편 차량 등에 설치돼 위치를 계속 바꾸는 수법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불법 환전 관련, 무등록 환전업소 93개·환전상 98명을 검거하고 불법 환전액 649억원을 적발했다.

아울러 올해 처음으로 단속 대상이 된 개인정보 등 불법 유통행위 관련 유통업자, 대부업자 등 18명이 검거됐다.

‘미끼문자’는 범죄조직과 피해자가 가장 먼저 접촉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데, 경찰은 문자발송 사업체 5개를 적발하고 운영자 등 23명을 검거했다.

대면 편취책 등을 구할 목적으로 구인·구직사이트에 가짜 구직광고를 제작, 게시한 피의자 15명도 검거됐다. 이들이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조직의 의뢰를 받고 올린 가짜 광고 글은 1032건에 달한다.

범행수단 단속과 차단을 병행한 결과 단속 종료를 앞둔 지난 9~10월 피해액이 300억원대를 기록하는 등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경찰청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내년에도 범행수단의 생성·유통행위 및 국내외 범죄조직에 대해 더욱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며 “법정부 합동으로 설립 추진 중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경찰청에 소속해 설립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환기자



보성경찰, 현금다액취급업소 범죄예방활동 전개

보성경찰서(서장 임진영)는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현금다액취급업소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특별 방범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성=김덕순기자



나주경찰, 안전한 나주를 위한 청소년 등하굣길 개선

나주경찰서(서장 박상훈)는 최근 나주 남평을 남평중학교, 광남고등학교 통학로를 신설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었다.

나주=송준표기자



광양소방, 사우나 등'비상용 목욕가운'배부 및 비치안내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는 사우나, 수면방, 안마시술소 등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한 인명대피를 위해 비상용 목욕가운을 배부한다고 전했다.

광양=김현근기자



진도소방, 필로티 건축물 화재 안전 주의 당부

진도소방서(서장 김광선)는 다가오는 겨울철을 대비해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나올 수 있는 필로티 건축물의 화재 예방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기자



완도소방, 가을철 불법 소각 행위 단속 및 진화

완도소방서(서장 김옥연)는 최근 가을철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및 화재 발생으로 인한 화재 진압을 실시하였다.

완도=기동취재본부



광주 동부소방, 차량용 소화기 및 주방용 K급소화기 비치 당부

광주 동부소방서는 날씨가 건조해지고 기온이 낮아져 화재발생이 증가하는 겨울철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차량용 소화기와 주방용 K급 소화기 비치 당부했다.

이슬비기자

‘밀고 부수고’...광주 첫 소방 방해차량 강제처분 훈련 실시

광주소방본부, 모의차량까지 동원해 실전처럼 훈련

“이제부터는 소방 출동을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적극 강제 처분을 할 겁니다.”

21일 오전 광주 북구 문흥동 한 골목. 교회 건물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자 소방차와 현장지휘차가 경광등을 켜 채 급히 달려왔다.

소방차 등 출동차량은 편도 1차선 도로 왼쪽 6m 남짓 폭 골목 안에 위치한 교회까지 진입해야 했으나 불법 주차한 SUV 차량에 가로막혔다.

지휘차량은 간신히 골목을 지나 교회 앞까지 도착했지만, 폭이 넓은 소방차는 골목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차한 대원들이 차량 앞 유리창에 차주 연락처가 남겨져 있는지 찾았으나 보이지 않았다.

대원들은 고민할 틈 없이 강제 처분 통보 서류를 SUV 앞유리창에 붙인 뒤 소방차에 올라탔다. 소방차는 SUV 조수석 측면을 그대로 밀고 지나가면서 현장에 도착했다.

소방 당국은 불법 주·정차 차량이 소방 출동을 방해하는 상황을 가정한 이 같은 훈련을 펼쳤다. 훈련에 동원한 모의 차량(SUV)을 직접 밀

고 부수면서 실전을 방불케했다.

소화전을 가로막은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유리창 파괴 등 훈련도 이어졌다.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라 소화전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에는 주정차가 금지돼있다.

대원들은 구조 공작 차량을 이용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실제 견인해보거나 공구로 유리창을 직접 부수고 소화용수관을 연결하기도 했다.

30분간의 훈련이 끝나자 참관을 나온 광주 5개 소방서 직원들은 대처 요령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특히 민원을 염려한 듯한 강제 처분 조건이 화두로 떠올랐다. 훈련 관계자는 “긴박한 상황일 경우 선조치 후통보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광주소방본부는 지난 2018년 소방기본법 개정 이후 이날 처음으로 불법 주정차 강제집행 훈련에 나섰다.

소방기본법 25조 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



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이나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이 같은 개정법이 지난 2018년 6월부터 시행됐지만, 실제 법에 따라 강제집행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서울 강동소방서 1건으로 유일하다.

광주소방본부는 이번 훈련을 시작으로 화재 현장 내 불법주정차에 대한 강제 처분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불법 주정

차 화재 현장 출동을 가로막아 재산·인명피해가 잇따른다. 특히 북구 두암동 등 주택 밀집가는 좁은 도로와 불법 주정차가 맞물려 대처가 어렵다”고 밝혔다.

또 “무작정 강제처분하는 것은 아니다. 처분 전 차주 등에게 연락한 뒤 조치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강제처분) 하는 것이다.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선욱기자



정성으로 빛는 동지팔죽 새알심

동지를 하루 앞둔 21일 부산 부산진구 삼광사 내 식당에서 불자들이 동지팔죽에 넣을 새알심을 빚고 있다. 삼광사는 신도와 시민 등 1만명과 팔죽을 나눌 예정이다.

광주 주택서 가스버너 부주의 추정 화재

21일 오전 0시 21분께 광주 서구 풍암동 3층 규모 상가 중 2층 집에서 불이 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47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집주인 A(68)씨가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3층 입주민 3명도 옥상으로 대피해 구조됐다.

또 안방 10㎡가 타 소방서 추산 98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났다.

경찰은 “휴대용 가스버너 사용 중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었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슬비기자



광주 또 건물 바닥 균열 대피, 인명 피해 없어

광주에서 건물 바닥 뒤틀림 현상이 일어난 지 이틀 만에 또 다른 건물에서 바닥 균열 신고가 접수돼 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21일 광주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9분께 광주 남구 월산동 5층 건물 중 4층 상점 바닥에서 균열이 일어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에 있던 10여 명이 밖으로 대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건물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관할 남구청은 한국안전진단구조사에 긴급 진단을 요청했으나 당장 붕괴 위험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주는 해당 건물에 대해 정밀 안전 진단을 의뢰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9일 낮 12시 32분 광주 서구 치평동 한 6층 규모 중 5층 바닥의 타일 여러 장이 뒤틀리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입주자 30여 명이 대피했다. 진단 결과 해당 건물은 겨울철 실내외 온도 차로 뒤틀림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났다.

오유나기자